

## 광주 R&D 특구 확정

이대통령 “지정 위한 행정적 준비작업 착수하라”

첨단·하남·진곡산단, 장성군 일원 5천200만㎡ 조성

광주시가 역점 추진해온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주와 대구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첨단산업단지 등을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으며, 지난달 지식경제부에 R&D 특구 지정을 공식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대구시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

통령은 “R&D 특구가 조성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하게 된다”면서 “일단 시작하고 나면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R&D 특구가 지정될 경우 지역 내 유수의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를 통해 첨단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조성방안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특구인 대덕에 이어 두 번째로 지

정될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첨단산업단지와 하남·진곡산단과 장성군 일원에 5천20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조145억원이 투입되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구거점화 ▲창업 및 연구성과 사업화 ▲특구선도 중소기업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이들 첨단산업이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첨단과학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과 연구개발에서부터 비즈니스, 문화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주시가 ‘문화와 첨단기

술이 융합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15조341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효과는 2만~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래전략이 미흡했던 광주권 북부지역이 확실한 광주의 성장 발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다음주부터 R&D 특구 지정에 관한 공식 절차를 지식경제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일 광주시 수완지구 열병합발전소내 발전동에서 수완에너지(주) 직원이 시험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수완지구와 하남2·첨단2지구 3만8천여세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열병합발전소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되면 난방비 10% 절감, 온실가스 34% 감축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완 열병합발전소 4월 가동

3만8천세대 전기·에너지 10% 싸게 공급

3,469억 투입...전국 최초 대단위 집단에너지사업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내 열병합발전소가 착공 4년 여 만에 완공돼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국 최초의 대단위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사업비만 3천469억원이 투자됐다.

광주시는 5일 “45Mw급 가스터빈 발전기 2기가 모두 완공돼 이달 말까지 시범운전을 한 뒤 다음달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소가 본격 가동될 경우 수완지구는 물론 하남2지구, 첨단2지구 등 3만8천720세대에 기존 중앙난방 요금보다 10% 저렴하게 열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 발전시설보다 온실가스 34% 감축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효율도 그만큼 향상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열병합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열 전용 보일러를 임시 가동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빌려 수완지구 내 30개 단지 1만3천879가구에 공급해왔다. 애초 지난해 10월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던 열병합발전소는 운영기관인 수완에너지(주)의 민간 자본 투자자인 경남건설이 워킹아웃 및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수완에너지(주)는 경남기업(70%), 한국지역난방공사(29%), 광주시(1%)가 공동 출자에 설립한 회사로, 수완지구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경남기업의 자금난으로 지난 2008년 11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 방안으로 ‘열병합발전소 준공 후 매각’이 결정되면서 경남기업 채권단인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투자에 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3만 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열병합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이를 통해 광주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선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2월 착공된 수완지구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냉난방 에너지를 일괄 공급하는 신개념 에너지사업이자 민간과 공기업,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 최초 사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튼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청!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논란 커지는 배심원제 고민 깊어가는 민주당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제동...주류·비주류 갈등까지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 공천 방법으로 도입한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내외부 반발 등에 직면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당장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역 선점은 최고위원회의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주에 무려 5차례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으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역과 방법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당헌

당규 등 경선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전남 여수시 등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및 전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한 부정적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추후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이날 전남도당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에 대한 명분과 원칙이 부족하다”며 “이는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실제로 구례 등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할 경우, 전문배심원은 비행기와 버스 등을 이용해 적어도 6시간 이상 이동한 뒤 4시간동안 경선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현실성이 떨어진

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내 주류·비주류 간의 미묘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동영 의원 측의 최규식 서울시장 위원장은 이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야심차게 도입했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이유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당내 주류 세력을 견제했다.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 내 오산과 안성 등 2개 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며 “특히, 충분한 소통없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과욕을 부리지 않겠지만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는 소규모 지역과 혼합형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찬미의 꿈’ 불황에 꺾일 위기 ▶3면 내 몸에 맞는 건강식품 ▶4면 직장 새내기 스타일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프로야구 시범경기 ▶14면

#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881-222-8100

1588-8489/0881-222-8100

02-222-8100